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철저히”

김관영 도지사, “전북의 국제적 위상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 도 핵심사업 국비 반영 총력 대응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일 모든 실국장 및 출자·출연기관장이 참석한 합동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논의와 실국 및 산하기관별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전북자치도의 도전과 혁신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 주신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본격적인 올림픽 유치전이 시작된 만큼 전북의 저력을 보여주고 도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연구원 정은천 박사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필요성과 추진 일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이장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각 분야별 협조 사항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현장 방문 대상 시군 및 유관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환영 퍼포먼스 등 세부사항까지 철저히 준비해 올림픽 유치 활동이 단순한 행사를 넘어 전북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1월 올림픽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했으며, TF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기업, 시군 등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유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김 지사는 2025년도 국가 예산 확정을 앞둔 시점에서 “현재 국회가 매우 긴박하고 유동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며, “2025년 전북 국가예산 증액을 위해 그동안에도 성실하게 대응해 왔으나,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내년도 국가예산안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역 국회의 원실과 협력해 끝까지 주시하고, 이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북자치도 합동 간부회의에서 도 실국장을 비롯한 산하기관장들과 도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회의를 갖고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반영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업무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내년도 업무계획도 충실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내년 업무와 관련하여 공격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는 동시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2025년 도정이 역동적이고 도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도 함께 전했다.

조지 내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

킨다”라며, “다양한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좋은 의견을 담은 공직사회의 쇄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지역과 계층을 중심으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재난단계별 대응 체계를 가동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최근 유행 중인 백일해에 대한 신속 대응을 강조하며 “소년·청소년, 임신부, 성인 대상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발생 상황을 철저

히 모니터링해 도민 불안을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후 전북체육회관 1층 야외광장에서 2036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체육인 한마음대회가 열렸다.

전북 체육인들을 비롯해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도의장, 박정규·임종명·강태창·김만기 도의원, 시군 단체인장 및 시군체육회장, 시군의원, 종목단체장, 대학 총장, 언론사 대표 등 지역 각계각층 인사 1300여명이 참석해 “전북 올림픽 유치 기원”을 열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문화예술인 70여명,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 삭감 규탄

“도내 예술인들의 헌신·도민 자부심 무시하는 처사”

“공익을 위한 책임 망각
도의회의 신뢰 실추
지역 문화예술계 혼란 초래”



전북문화예술인들이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문화예술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에서 얼마 전 2025년도 전북 문화관광재단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전북문화예술인들이 집단 시위에 나섰다.

전북문화예술인 70여 명이 2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앞에서 각종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와서 ‘전북 예술인 다 죽이는 예산삭감규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성혁 예술가의 사회로 시작된 성명서 발표에서 “전북자치도의 예산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인데 A도 의원의 ‘재단 예산의 41% 삭감 발언’은 과연 어떤 법적·행정적 근거에 기반한 것인가?”라며, “전북자치도의 예산이 개인적 사적 자산이 아니라면 예산 삭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의원의 발언은 공공성을 지켜야 하며, 도민을 위한다는 의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할 것이다.”며, “그러나 이번 예산삭감 발언

은 무책임하고 경솔한 태도로 전북 문화예술계에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도의원이신 신분을 가진 공직자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을 불모로 삼는 행위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누리 예술인은 “전북의 정체성을 이루는 근간인 문화예술을 과점에서 발견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방식이 결국 문화예술인들의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창작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했는지 묻고 싶다.”며, “전북도회의의 태도는

이러한 전북의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헌신과 도민의 자부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여송 문화인은 “문화예술인의 권리와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 문화예술인은 창작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발언은 예술인들의 노력과 성과를 경시하며, 그들의 역할을 부정하는 인상을 남긴다며 문화예술은 단순히 삭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다.”고 말했다.

정성구 예술인은 “공직자는 책임

있는 언행을 해야 한다. 도의원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공익을 위해 책임 있는 발언과 행동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발언은 이러한 책임을 망각한 것으로 전북도회의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지역 문화예술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단 시위에 참가한 문화예술인은 전북자치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극, 시각 미술, 음악 등 다채로운 분야의 청·장년 문화예술인 70여 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산삭감 규탄 성명서에 참여 서명한 예술인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530여명에 이른다고 김성혁 예술가는 밝혔다.

이번 집단 시위가 발생하게 된 계기는 A도 의원이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전북문화관광재단 소속 본부장 인사에서 정계처분을 받았는데도 오히려 승진을 하게 된 것이 잘못했다는 것에서부터 촉발됐다.

이후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예산삭감이 이루어졌다고 언론에 보도되자 생긴 것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도의회와 문화 예술계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내장상동을 체류형 관광 정읍 중심축으로”

민주 윤준병 의원, 내장상동서 ‘토방청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달 30일 정읍시 내장상동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현장 중심·지역 밀착형 소통의 대표 브랜드 토방청담(土方淸潭)을 개최했다.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 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토방청담에는 내장상동 주민들의 견의와 민원·애로사항을 듣는 질의응답 시간에 이어 윤준병 의원이 꿈꾸는 미래의 ‘내장상동’에 대한 포부와 계획을 이야기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이날 토방청담에서는 내장상동 주민들 사이에 내장산을 중심으로 한 정읍시의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 대

해 마치 토론회를 방불케 하는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윤 의원은 내장산과 정읍 일대를 4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내장저수지와 생태공원·문화광장·국민연금공단 인재개발원 일대를 중앙축’, ‘내장사와 내장상가·관광호텔 일대를 동부축’ 등으로 설정하고 먹거리·잘거리·볼거리·체험거리를 보강해 서로 연계하는 구상을 선보였다. /이만호 기자



‘202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받은 의원들과 문승우 도의장, 장영국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시상

정종복·이정린·이병도·이명연·전용태 의원 수상 영예

장영국 대표의원(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종복 의원, 이정린 의원, 이병도 의원, 이명연 의원, 전용태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가 선정한 ‘202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장영국 대표의원은 “도민의 대표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복리향상에 기여한 사항을 확인하고, 정책(사업)의 명실반백 분석과 현장확인 등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정비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문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다”면서 “영예로운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정종복 의원(기행위)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 소용대로 정책화 비유 제고방안, △전북발전연구원 출신정책 추진방안 연구 관련 신규 정책 발굴 주문, △제2 중앙경찰학교 유치 노력 촉구 등 정책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정린(농복원위) 의원은 △시군 농업용 저수지 관리 실태 파악 및 신속한 조치 요구, △노인복지시설 입소 노인 경제적 확대(갈취, 사기 등) 문제 발생에 따른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실시 주문, △농업기술원 직원 간 갈등 등 심각, 상담실 운영방식 개선 및 조직진단을 통한 해신방안 마련을 주문하는 등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안전하고 노인학대 예방 대책 수립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만호 기자

이병도(경산건위) 의원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 건설업체 행정처분 건수 증가 분석, 타 시도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실질적 안전사고 예방책 마련 요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에 대한 예방대책,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안전교육 활성화 요청, △전북개발공사 2023년도 결산 영업이익률 -8.99% 마이너스 기록,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중 유일, 특단의 대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명연(문안위) 의원은 △지역안전지수 연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시군별 취약 분야 중심 사업 추진 요구, △계곡·하천 불법 영업 철거한 관리, 불법 평상 등 무단 하천 점유 등에 합동점검 단속 추진 주문, △공공주택 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 발생 가능, 대응 매뉴얼 및 화재 대응 교육 신속 추진 등 정책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효과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전용태(교육위) 의원은 △학생 안전 및 학생건강 분야 질의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계획 및 보고 요청, △연차회 및 체육대회 예산 적정 편성·집행, △교육 문화관이 없는 군 단위 위 지역에 대한 검토와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 안전과 건강 분야에 집중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문화관 건립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에서 시군 간 형평성을 강조했다.

교섭단체 주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시상도 도 및 도교육청의 각종 정책(사업)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제도의 완성도 제고 및 정부를 유도해 교섭단체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이다. /이만호 기자

“지역AC세컨더리펀드 조성 불확실성·부실 운용 우려”

도의회 예결특위, 기업유치지원실 등 대상 예산 심사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2일 ‘2025년 전북자치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기업유치지원실, 도민안전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어졌다.

오은이 의원(진보당, 순창)은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노사화합가교제 지원의 경우 1회성 행사로 예산과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재 전가특장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외국인 노동자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린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1)은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서울 수도권 내 투자유치 홍보와 새만금 투자 설명회 참가 사업과 관련해 사업 내용에 대해 묻고, 행사성 경비로 홍보로 인한 실적에 대해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최근 3년의 실적 자료를 요구했다. 또한, 육아휴직 대체 인력 근로자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조사를 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현장조사와 모집 가능성과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은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해외통상거점센

터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묻고, 최근 3년간 실적자료를 요구했다. 김경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명장 선정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선정 직종과 운용방식에 대해 묻고, 직종별 배분을 통해 직종 간 형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하우우미매캠프 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해 사업 내용에 대해 묻고, 발대식 및 멘토멘티 결연식 등 일회성 행사로 문제라고 지적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사업의 경우 대체인력 채용의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성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전북 지역AC 세컨더리펀드 조성 지원 사업의 필요성과 운용방식에 대해 질의하며, 불확실성과 부실 운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캠퍼스 테크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은 전북대 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보다 예산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 묻고,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한데도 감액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만호 기자